

5·18 민주화운동의 지역성 극복을 위한 방안연구

- 학술논문 저자와 학술지 편중분포를 중심으로 -

정근하 조선대학교

논문요약

5·18 광주 민중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에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재해석,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5·18을 달리 평가하는 저널이 가해자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평가가 양분 된 채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간혀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간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고지역에 편중분포(광주·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주의, 연구자, 편중분포, 5·18 정신의 전국화

I. 들어가며

한국의 “망국병”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감정”은 통일 한국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우리사회의 과제이다. 전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17일 대통령후보 방송연설에서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대통합의 길을 열기 위해 대선후보 선출 이후 만든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대통합 위원회 설치를 약속하였고, 2013년 7월 16일 “우리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는 대통령의 자문 기구” 국민대통합 위원회를 출범시켜 한국의 지역감정(동서갈등, 지역주의)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집권 이래 주요부처 장·차관 인사가 특정지역 사람들로 임명되면서)1) 인사에 대한 지역안배 논란이 탄핵정국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지역감정을 해소할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민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이를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지자체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은 선거 때 마다 전세를 뒤엎는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확실하여 학자들이 내 놓은 각고의 방안들이 순식간에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동서갈등, 지역주의, 지역감정”의 유래에 대한 설(선행연구참고)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의 지역갈등이 “호남(피해자) vs 영남(가해자)”이라는 구도에 이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해방 이후 두 지역 간의 갈등구도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광주 민주항쟁일 것이다. 어찌 되었든 5·18 광주 민주항쟁은 1993년

1)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6대 권력기관의 장·차관급 인사 31명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보도했다.(「시사인전」, 2015/3/19).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우리 민족이 민주화를 향한 역정에서 우뚝한 한 봉우리”라 재평가 되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5월에는 유네스코는 세계기록 유산으로 승인됨으로써 광주시민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5·18의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다²⁾. 2013년에는 대구의 대학생이 5·18희생자의 관을 “택배”로 비하하였고³⁾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추모곡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부적당하다며 보수단체와 5·18단체가 격하게 대립하는 등 동서갈등의 골은 매워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구지역에 편중분포(광주·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1. 연구방법

5·18 정신의 전국화를 막고 있는 요인으로 5·18 유가족들의 당사자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연구는 5·18 관련 학술논문 저자들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분포 되어 있다는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학위논문을 비롯한 연구논문, 저널, 단행본 저자

2) 경남지역의 한국논단은 1980년 5월 18일에 대해 관련 증인들과 학자들에게 글을 쓰게 하고 있다. 특히 광주학살의 주범이 “전두환이 아닌 김정일이다. 광주의 ‘민주투사’로 둔갑 시키지 말라”(임천용: 2007, 98), “광주사건은 김대중의 폭동이었다”(한국논단: 2014) 등의 글을 통해 가해자(북한)와 주동자(김대중)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3) <http://article.wn.com/view/WNAT1919bbd897a8cbcd5f732bd94e5c9fc4/>, 검색일 2013/10/13.

들의 지역성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이에 대부분의 대학교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index.do>) 사이트를 선정하여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자료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 사이트는 국회도서관만큼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지만, 교육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이 서비스와 협정계약을 맺고 있어 자료수집에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2017년 9월 현재 RISS에서 “5·18 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하자 “5·18 광주”라는 키워드로는 학위논문이 3084건, 국내 학술지논문 600건, 학술지, 1건, 단행본 4599건, 연구보고서 등 146건, 총 8431건이 검색이 되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키워드로는 학위논문 108건, 국내 학술지논문 120건, 학술지, 1건, 단행본 644건, 연구보고서 등 27건, 총 900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키워드로 검색된 자료들 중 국내 학술지논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단행본 저자들의 경우 사건 당사자(호남 출신 혹은 영남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학위논문의 저자의 경우는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학술논문은 단행본과 비교해 저자의 저술 동기가 목적의식적이지 않으며, 연구대상 선정 배경이 상대적으로 개방적 조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술 논문은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체험적 사실에 기초한 전기적 서술 또는 규범적 논의보다는 이론화를 지향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 학술지논문 분석이 “5·18 정신의 전국화” 저해요인을 분석하는 틀로써 적당하다 판단했다.

두 키워드를 통해 얻어진 720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과 실제로 관련된 자료는 172건으로 분류 되었다. 분류된 172건의 논문들은 먼저 저자의 소속지(소속대학, 소속연구소) 지역별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다음은 학술지가 간행되고 있는 지역을 조사,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호남에 갇혀있게 된 많은 이유

들 중 당사자주의 특히 5·18관련 연구자들의 지역성 즉 “편중분포”에 있음을 논문 저자, 학술지 발행 지역 분석을 통해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5·18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미친 역사적 의의라든지, 한계를 다룬 논의가 아님을 미리 밝힌다.

2. 5·18의 광주 고립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한국 민주주의 연구소(2005)의 「지역과 전망」 10권에서 “5·18은 왜 아직도 호남에 갇혀 있는가?”라는 주제로 5편의 특집 글을 기고케 하였다. 5편의 글들 중 조진태(2005), 이윤갑(2005)은 의미 있는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조진태(2005, 48-50)는 5·18정신이 흐트러진 요인에 대해 5·18 피해자들의 당사자주의에 있음을 지적한다.

웅장하게 깎아지른 국립 5·18묘지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지나면서 그 거부감만큼이나 구묘지(망월동 묘지)에 대한 가슴 벅찬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이 흐트러지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많은 부분은 소위 당사자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일부 피해보상을 받은 관련 당사자들의 그릇된 태도로 인해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이 클 것이다. 5·18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이용하거나 자신의 치부와 명예를 얻는데 5·18을 팔아먹은 사람들 또한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순결하게 지켜야 할 청년의 5·18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정신적 가치를 재정찰하고 현재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들이었다.

광주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한 정치인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렸다. 그리고 일부 5·18 피해보상 당사자들이 광주의 환심을 사고자 노심초사했던 정치인들의 노리개가 되었던 사실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어쩌면 5·18의 숙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미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가능성은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1980년대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부르짖으며 살아냈던 사람들에게 1990년대의 풍경

은 너무도 낮설었다. 운동 내에 하나의 권부가 형성되어 갔다. 국회의원도 되고 도덕적 명망도 얻게 되면서 5·18은 국민 모두가 수평적 연대감을 고루 획득하는 방향이 아니라 역의 방향으로 질주해 갔다. 그러므로 작금의 5·18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부분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더불어 광주 시민의 태도도 명확하게 갈라섰다. ...중략...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정략적으로 이용되었고 개개인에 대한 물질보상과 명예회복은 5·18항쟁의 정신적 가치정립과 운동적 연속성을 분리시켰다.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은 간 주도로 착착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정에 운동 세력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당사자주의는 5·18항쟁을 보상받은 개인의 문제로 바꿔버렸다. 집단배상이 아니라 개인보상 차원에서 물질적 대가가 주어지고, 이들이 한편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기에 이르면서 완벽하게 고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의 즉각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항쟁 자체가 그러하였듯이 공동체적 보상 국가배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다. 노태우와 정치권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진태는 5·18 민주화운동의 주체였던 광주 사람들의 당사자주의가 도리어 5·18 정신을 스스로 흐뜨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윤갑(2005, 67-70)은 제5, 6공화국 권력의 본거지인 영남지역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평가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권력 요직에 진출한 (영남)지역출신 엘리트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들의 영향력에 의지해 특혜적 방식으로 생존문제를 해결하려는 비민주적인 문화나 관행이 지역사회 내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은 민주화운동의 발전을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받자 지역 주민과의 이러한 야합을 의식적으로 강화해 간 반면, 민주화운동은 이들을 대신할 현장성 있는 행위 및 관계방식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가 그 장기화는 대중들이 민주화운동을 외면하고

보수적인 권력엘리트들을 지지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었다. ...중략... 영남의 민주화는 이곳의 보수 세력의 아성으로 남아 있는 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영남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청산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사 청산문제는 특히 영남지역의 민주화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 청산이 거론되는 주요 사건에 이 지역 출신의 권력 엘리트들이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그들을 위시한 이 지역의 보수 세력들은 이 사건들을 통해 형성한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그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그들은 이 사건들을 통해 민주주의는 혼란이고, 무질서이고, 비능률이라 규정하며, 심지어 용공이고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까지 매도해 왔다. 그러한 왜곡과 음해가 이 지역에서 보수적인 지역주의가 형성되고 위세를 떨치게 하는 지렛대가 되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거사를 규명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보수 세력들의 이러한 파렴치한 술수를 종식시키는 길이 될 것이고, 이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정치적 양보나 타협 없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각 계층이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윤갑은 영남지역 출신의 권력엘리트들이 오랜 기간 정권을 장악하였고, 그 기간만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에 특혜를 제공해줌으로써 영남지역민들은 비민주적인 방식의 특혜에 익숙해진 것이라 보았고, 지속적인 특혜를 받기 위해 그들을 옹호함으로써 이 지역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 지난 세월의 과거사 규명과 반성에 소극적인 관계로 5·18 민주화운동의 전국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한국사회의 민주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사변의 가해자였던 신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냉전 수구세력의 비등한 지역감정을 이용한 전략은 5·18 정신을 국지화 하였고

광주만의 사건으로 고립시키려 하였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과거사 규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최준영(1998, 1-2)은 학자들의 영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당시 학자들에게 놓인 정치적인 상황과 지역감정이 객관적인 연구를 가로 막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그간 언론과 각종 운동단체, 학생운동 등을 통해 수도 없이 언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별로 축적된 것이 없다. 이는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초기의 사회적 상황이 5·18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도록 만든 데도 원인이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문적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5·18에 대한 학문적 평가가 부족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각 세력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학자들 간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또 다른 요소는 지역감정이다. 지역감정의 실체와 강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나 정치권에서 통일된 견해가 확립된 것은 아니나, 각종 선거에서 지역감정의 존재는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언론은 이를 개탄하는듯하면서도 확대 보도함으로써 지역감정의 실상과 심각성을 필요이상으로 부풀린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 연구를 지향하는 학계라 해서 지역감정 문제를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다.

최준영(1998, 16)은 5·18이 광주만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원인에 대해 광주시민의 경우, 홍보부족과 언론의 왜곡이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는 반면 타 지역민들은 지역 소외와 차별을 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응답이 '모르겠다(33.9%)'는 대답이 많았다며 이것은 광주에 비해 타 지역 사람들이 5·18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 소개하였다. 이에 정근식(1991)은 지역적 편차는 특정 지역민

들이 의식에 기인한다기보다 5·6공 시기의 언론탄압과 여론조작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월 특별담화를 통해 5·18은 우리 민족이 민주화를 향한 역정에서 ‘우뚝한 한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정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라 평가하며 광주에 머물러 있던 5·18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로 격상되었고, 1997년 4월, 5월 18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전국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광주의 사건으로 은폐되어 있던 5·18은 지역주의의 장벽에 막혀 전국화 되지는 못하였다. 나간채(2009, 106)는 5·18이 전국화가 아닌 국제화로 우회한 이유가 지역주의에 있음을 지적하였고, 정근식(2005, 85)은 5·18의 국제화에 전국적인 지원이 아니라 광주지역의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 점을 5·18의 “당사자주의”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지역주의 문제는 역사적인 뿌리를 갖는 지역적 편견이 사회의 밑바탕에 침전되어 잠복되기도 하고 특정의 국면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서 큰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지역주의의 기본 내용은 호남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호남인과 다른 지역, 특히 영남지역 출신과의 정치적 경쟁상황에서는 매우 가열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1970년과 1987년에 시행된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갈등은 정점에 달했었다. 물론 이 지역감정과 편견은 광주항쟁 당시에도 갖가지 풍문의 형태로 떠돌았고 그 자체가 항쟁과정에 영향을 준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국면에서 5월운동은 광주항쟁의 민주적 정당성과 그 역사적 의의가 전 국민에 의해 인정되는 명예로운 결과를 기대해 왔으나, 항쟁에서 가해자이었던 신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냉전 수구세력은 비등한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광주항쟁을 국지화하고 광주를 고립화시키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광주항쟁의 전국화에 대한 냉전수구세력의 반발은 5월

운동의 진전에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국면에서 5월 운동은 광주항쟁의 진실과 그 정신을 해외에 전파하고 해외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국내의 장벽을 우회하여 뛰어넘는 전략이 바로 국제화의 길이었던 것이다(나간채 2009, 106).

5월 정신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1993년 말에 결성된 시민연대모임을 주축으로 하여 1994년 5월 「해외에서 바라본 5·18광주민주항쟁」이라는 국제심포지움, 1995년 5월에도 「반인륜행위와 처벌」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 그리고 1996년의 국제청년 캠프로 이어졌다. 여기서는 5월정신의 핵심을 「인권과 평화」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의 가능성을 시험한 좋은 사례였다. ...중략... 특히 5·18재단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994년 말에 설립된 5·18재단은 ‘광주’의 전국화와 학술적 조명을 위해 1997년 한국정치학회, 1998년 한국사회학회, 1999년 학술단체 협의회에 의뢰하여 서울에서 전국적 학술대회를 열었다⁴⁾. 이런 전국화를 위한 노력은 2000년 2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로 연결되었으며, 2001년에는 독일에서의 학술회의로 나아갔다. 5·18재단의 ‘광주 국제화’ 프로젝트의 중심에 ‘광주 인권상’이 있다. 2000년부터 이루어진 이 제도를 통해, 시민연대가 개척한 동아시아적 인권운동의 지평이 광주에서 실현된다. 동티모르의 구스마오를 비롯하여, 홍콩이나 스리랑카, 버마의 활동가들이 이 상을 수여받았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도 학술적으로 국제화에 기여하였다, 2000년에는 ‘민주화와 5·18’, 2001년에 ‘동아시아의 민주화’, 2002년에는 ‘민주화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정근식 2005, 85-87)

5·18은 지역주의라는 장벽과 광주시민들만의 관심으로 전국화에

4) 이의 성과가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한국사회학 편, 나남출판사, 1998과 『5·18은 끝나는가』 학술단체협의회의 편, 푸른 숲, 1999의 출판으로 나타났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1998년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다. 정근식(2005, 89)은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5·18 정신이 민족자주와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과제 앞에 국내적 맥락에서 약화되었다 평가하였다.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자주의 요구를 체제내 화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높였지만 민중운동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새로운 차원의 딜레마가 확산되었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5·18묘지의 국립묘지화, 5·18희생자의 국가 유공자화가 이루어지지만 몇몇하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5·18이 발발한지 37주년이 되는 지금,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고, 특히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5·18 민주화 정신의 전국화가 기대되었으나 분단 현실에서 민족자주와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과제 앞에 5·18 민주화 정신의 전국화는 퇴색되었다. 이처럼 5·18 민주화 정신은 지역주의, 지역감정이라는 장벽 앞에 전국화보다 먼저 국제화로 우회하게 됨으로써⁵⁾, 순서가 뒤바뀐 채 호남에 갇혀 있게 된 것이다.

3. 한국사회의 지역주의, 지역감정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의 “망국병”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지역감정, 동서갈등 문제는 통일 한국을 이루는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우리사회의 과제로 그 해결 방법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고, 특히 동서갈등에 관한 기원에 대해서 이이화(1983)는 4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삼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지역감정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 이기백(1971)은 부족

5) 유네스코는 2011년 5월 5·18 민주화 운동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승인 하였다.

국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역감정의 연원을 찾고 있다. 한편 고려태조의 훈요십조가 후백제 지방 출신인을 경계하고 요직에 발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고려시대부터 호남인들에 대한 편견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중앙 지배계층에서 배제되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남영신, 1991). 그러나 한국의 동서갈등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된 시기에 대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1960년대 이후라 생각하고 있다. 1988년 한국사회학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감정과 갈등이 형성된 시기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는 제3공화국부터라 보았다. 즉 지역감정이 형성된 시기에 대해서 응답자의 17%가 조선시대, 2%가 일제 강점기, 10%가 자유당시대, 31%가 공화당시대, 17%가 민정당시대, 모르겠음 24%라 답하였다. 또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시대 1%, 일제 강점기 1%, 자유당시대 4%, 공화당시대 26%, 민정당시대 49%, 모르겠음 19%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우리 국민들이 공화당시대 이전에는 지역감정의 골이 깊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협 1996, 250-251).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동서갈등, 지역주의, 지역감정은 실질적으로 1960년대 이후 나타난 정치·경제적인 요인을 비롯하여 정치적 특혜를 통한 경제적 수혜를 받는 지역과 소외당하는 지역의 심리적인 소외의식과 배타적 차별의식(조경근 1987; 조민 1995; 홍동식, 1992)으로 한국 근대화의 산물로 설명하고 있다. 이소영, 정철희(2003, 34-35)는 지역감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역감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사회심리적 접근과 정치·경제적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김종호 1993; 홍기용 2001). 사회심리적 접근방법은 주로 심리학에서 연구되었던 것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정치·경제적 접근방법은 사회학과 정치학에서 주로 이뤄졌던 연구로, 지역격차와 선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두 입장이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니며 역점의 차이로 인해 지역감정의 실상의 파악이나 그 원인의 규명 및 문제 해결의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김

종호 1993). 정치·경제적 접근 방법은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정치적 변동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감정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생성된 엘리트 충원상의 차별과 경제성장과정의 지역격차가 지역감정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즉 정통성이 취약한 권위주의 정권이 권력의 유지·보호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친위세력을 구축하려고 권력자 개인의 지연 등에 기반하여 엘리트층을 충원하고 이들의 출신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경제적 투자를 하여 갈등상대지역인 호남의 소외와 낙후성을 가져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지역감정을 낳게 되었다는 주장이다(김용학 1989; 최장집 1991; 김문조 1993; 손호철 1993; 김주택 1994; 정근식 1997; 김성국 1999; Yea 2002). 지역간 불균등 성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주민 1인당 지역 총생산 규모가 전국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경기·인천과 부산·경남뿐이었음이 밝혀져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김영정 1992). 정치·경제적 접근은 지역감정의 발생 시기를 정치권력이 영남권에 집중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로 보기 때문에 몇 가지의 올바른 정책만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문제의 해결 또한 단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전병재 1990). 이러한 정치·경제적 접근은 우리 사회의 지역간의 문제를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근거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것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지역감정에 대한 설명을 풍부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설명은 사회문화적 설명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사람들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차별하는 데에는 문화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적 설명과 대비되는 사회심리적 연구들은 지역감정의 원인을 고정관념과 편견의 사회화로 설명한다(이진숙 1959; 고흥화·김현섭 1976; 김진국 1988; 김혜숙 1988; 민경환 1991). 지역주민이 지역적 연고에 따라 내외집단을 구분하면서 상호 지역주민에 대한 상이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초기 사회화과정에서 세대간 학습되고 직·간접 경험에 의해 강화되어 지역감정이 발생한다고 한다(조경근 1987).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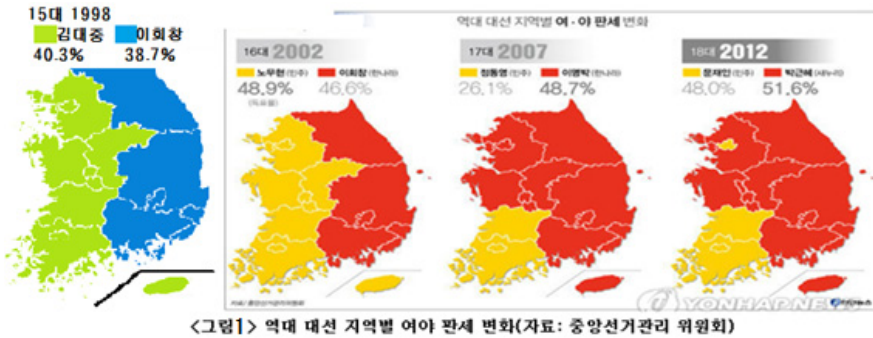
한 연구는 감정과 편견이 단순히 영·호남간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대한 여타지역들이 갖는 문제라고 보며 편견의 역사적 뿌리가 비교적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해결방법도 역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 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접근은 고정관념 및 집단의식의 형성에 관한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을 도입하여 한국사회 지역감정의 존재양태와 그것이 형성되고 학습되는 배경에 관한 하나의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실증적인 연구조사를 통하여 지역감정의 형성 주제, 초보적인 담론의 형성과정, 매스컴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분석하여 지역감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김만흠 1991; 김재철 1996).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역주의를 오늘날 한국정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손호철 1993; 최장집 1993; 1996; J. Choi 1993; E. Chung 1996; 황태연 1996, 조기숙 1996). 최장집(1993, 411)의 경우 “한국은 언어, 인종, 종교가 상이하지 않은 조건에서 정치적 배제와 소외감이 자아내는 지역대립의 깊이가 매우 깊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사회에서 동서갈등, 지역갈등, 지역주의가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이유는 조국 통일과 한국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4. 동서갈등, 지역주의,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 방안 연구들

노동일 외(1997, 4)는 7대 대통령선거(1971년 4월27일) 때부터 동서갈등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고, 조기숙(1997, 205)은 1987년 대선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역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등 학자들마다 동서갈등의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지역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한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처럼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서양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은 조국통일을 위해 척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인 동시에 “망국병”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동서갈등, 지역주의,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다⁶⁾.

한국사회의 “동서갈등, 지역주의, 지역감정”은 다른 아닌 호남과 영남 지역의 갈등구조이며, 이 갈등구조의 저변에는 5·18 과거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응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5·18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요구되며, 5·18 정신의 심화를 비롯한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확산시키는 전문가 양성이 병행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명시”문제는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지역에서의 정기적 학술대회와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6) 영·호남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경북대·전남대 교류학생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TV 및 언론 상호간 보도교류, 민간단체의 낙선운동 등이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1> 지역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들

연구자	지역갈등 해소 방안
손호철(1993)	1. 지역주의 갈등을 깨뜨리기 위해 보수-진보의 구도 타파이며, 피해자는 호남지역이다. 2. 호남의 사회, 경제적 낙후성과 사회계급적 위치는 진보정치의 본거지가 되어야 한다.
최장집(1996)	1. 군부독재자가 배제해온 노동과 호남의 두 핵심적 기반이 포괄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재벌구조 해체, 3.부의 형평분배와 사회보장제도 확충, 3. 남북관계 개선과 냉전 반공의식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음.
윤용희(1998)	1, 정치의 민주화, 2. 공정한 인사정책, 3. 국민의 올바른 대선과 총선 자세, 4. 균형과 조화로운 경제정책과 지역개발, 5. 상호보완적인 사회문화정책, 6.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민간단체 위주의 상호교류와 실천운동 전개, 7. 공정하고 균형감각 있는 언론의 보도와 계몽자세
유명철(1999)	1. 내각책임제의 실시, 2. 선거제도의 개선, 3. 지방자치제도의 완성, 4. 혁신정당의 정착, 5. 행정구역의 개편, (1) 경제적 격차 해소, (2) 인물등용의 지역안배, (3) 지역간 교류증대
최두현(1999)	1. 국민통합 저해 정치인·언론인 감시단 구성, 2. 국민통합을 위한 권역별 세미나, 3. 민주시민사회 만들기-민주시민학교, 4. 지역 바로알기-역사문화탐방, 5. 21세기 지역포럼, 6. 활동백서 발간
황태연(1999)	1. 저항적 지역연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한다.
오수열 외(2000)	1. 갈등의 근본원인을 규명, 2.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부패한 정치집단들을 타파하는 시민단체 결성, 3. 인적교류 제도화, 4. 영·호남 시민단체들의 합동 낙선운동 및 시민대표 추대, 5. TV 및 신문 등 각종 언론에서 상호간 보도교류 활성화, 6. 경제교류, 협력의 활성화, 7.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갈등 극복 의지 강화, 8. 범국민적 기구 설치, 9. 언론계의 적극적인 참여, 10. 각종 정부 사회단체의 회의 등의 지역 순회 개최.
김재선(2001)	1. 수도권 집중의 극복과 균형 개발을 위한 연대와 교류, 2.

	퇴영적 지역주의를 확산시키는 지역정치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증진, 3.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연대-국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교류협력
유재일(2001)	1. 학생 및 교원의 지역교류 촉진, 2.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
조순제(2004)	1.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의 원리를 철저히 적용하는 제도 개선,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2. 보스중심의 지역정당 구조 개선, 3. 선거제도 개편, 4. 정보의 공개를 통한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5. 민간주도-특히 종교, 학술·문화 단체-의 교류확대.
권오성/한형서 (2008)	1. 건전한 시민윤리의식의 강화, 2. 현대사회의 가치의식 강조, 3.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Ⅲ. 5·18연구자 편중분포와 5·18정신 전국화의 한계

5·18정신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규명이 선결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5·18 당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 통일한국과 국제시대를 겨냥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공교육을 비롯한 시민교육에 응용되어야 한다. 올해로 37주년이 되는 현재까지 5·18이 강한 지역성을 띄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학술연구 저자들의 소속, 학술지 소재지와 관련된 공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표 2>는 학술논문 및 저널 자료 논문저자들의 소속을 분석한 것이다.

<표 2> 학술논문 및 저널 자료 저자의 소속 분석⁷⁾

대학교 및 연구소	저자명(출간년도)	저자수
전남대	강현아(2002), 김기곤(2009), 김용철(2001, 2015), 김재기(2012), 김종현(2005), 김희송(2013, 2014, 2015, 2016), 나간채(1996, 2004, 2005, 2008, 2009), 류재한(2007), 박구용(2007, 2010), 박만규(2003), 변동현(전남대)/김영기(전남대)(1993), 배종민(2005, 2007), 송정민(2005), 심영의(2008a, 2008b,	29명

	2008c, 2009, 2015, 2016, 2017), 오승용(2014), 윤선자(2001, 2002, 2005, 2012), 오재일(전남대)/이명규(전남대)(2012), 이승희(2012), 전동진(2013), 정명중(2005), 정미라(2006), 정태호(2000), 주정택(2007), 최영태(2005, 2006, 2010, 2015a, 2015b), 최정기(2008a, 2008b, 2010, 2015). 유인(2015), 최윤경(2016)	
조선대	김상재(2004), 고준석(조선대)/정재호(조선대)(2012), 노영기(2005, 2013a, 2013b), 오수열(2003), 이종범(2004, 2005), 임경규(2010), 이병섭(1992), 정주신(2007).	9명
광주대	윤석년/강철수(2010), 박명서(1991), 박주석(광주대)/조대연(광주대)(2001), 은우근(2005), 최준영(1998), 한규무(2012a, 2012b).	8명
호남대	신일섭(2005), 최영화(2008).	2명
동신대	차수봉(2013).	1명
광주가톨릭대	김상용(2014), 김정용(2013).	2명
광신대	안진(2004, 2005, 2007).	1명
원광대	이희성(2007, 2009), 양야기(2014)	2명
전북대	변주나(1996, 2000).	1명
한려대	전홍남(2015)	1명
광주, 전남지역 연구소	부유진(2014), 정호기(2002, 2003, 2013), 조진태(2005), 김양래(2010), 김진호(2010), 안수경(1997), 안중철(1999, 2002), 이상갑(2010), 이석태(2010), 한상봉(2010). 배이상현(2015), 안길정 (2017)	12명
서울대	정근식(2005a, 2005b), 한인섭(2002).	2명
고려대	윤석년(광주대)/강철수(고려대)(2010), 이성우(2011), 조대연(2003).	4명
연세대	이동윤(신라대)/박준식(연세대)(2008), 이종인(2012).	3명
서강대	강승목(공주대)/황인성(서강대)(2009), 김정환(2008, 2010a, 2010b, 2012).	3명
건국대	김면(2013).	1명
단국대	김상숙(2015)	1명
한국외대	박영민(2010).	1명
국민대	김영역(2001).	1명
한양대	김옥란(2007).	1명
중앙대	노동은(2013), 주인(2003).	2명
성균관대	천유철(2014, 2016).	1명
경희대	서유경(2014), 신지연(2007).	2명
성공회대	이광일(2005).	1명
동국대	전미영(2010).	1명
성신여대	홍석륜(2007).	1명
한국예술종합학교	채희숙(2012).	1명
한림대	전광석(2000), 김양선(2007).	2명

평택대	조혜영(2007).	1명
호서대	이보영(2007).	1명
대구대	김두식(2003).	1명
계명대	이윤갑(2005), 이종오(1996), 이춘희(1996).	3명
경주대	차원현(2010).	1명
경남대	김용복(2010).	1명
부산대	허윤철(2012), 박중현 (2016)	2명
신라대	이동윤(신라대)/박준식(연세대)(2008).	2명
청주대	김정숙(2007).	1명
충북대	정태일(2011).	1명
충부대	허현주(2002).	1명
배재대	김중서(1995), 김화선(2013).	2명
한일장신대	송동운(2000), 이규태(2000).	2명
외국대학	조지 카차아피카스(2002), 김미경(2008), 배재창(2016)	3명
타지역연구소/연구원/교회/천주교, 소속 미확인자	김권희(2014), 구영식(1997), 권은중(1998), 김창현(1999), 김영기(1993), 박원근(2011), 왕상상(2014), 이광일(2004), 이재의(2005), 김원(2015a, 2015b), 김잔하(1995), 김진호(2010), 김희중(2014), 박동호(2014), 변자연(2006), 아가뎀(1994), 이재승(2007), 이정운(1995), 이재민(2010), 정유하(2003), 이해영(2016), 이상민(2016), 한은주(2017)	23명
저자 미상	한국여신학자협의회(1995), 한국군사학회(1998).	2명
한국논단	임찬용(2007), 김효선(2010), 조영환(2010), 지만원(2002), 김대령(2013, 2014a, 2014b), 이도형(2013, 2014), 이돈(1996), 이명량(1996), 이주천(1995, 1996, 2010).	9명

<표 3>은 저자들의 대학의 소재지 및 연구소의 소재지를 지역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 표 3 > 학술논문 작성자 소속지 구분표

지역대 학/연구 소	광주·전라 도/연구소	서울·강원/ 연구소	대구·경북/ 연구소	경남·부산/연 구소	외국	기타 지역
학자수	56명/12명	28명/14명	5명/1명	9명·5명/1명	3명	9명

7) 본 자료들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5·18 광주”라는 키워드로 국내학술자논문만을(900편) 검색하여 5·18과 관련된 자료(172편)만을 분석한 자료이고, 공동저자의 경우 각각의 대학에 모두 이름을 기록하였다.

RISS를 통해 검색된 5·18관련 학술연구논문, 저널연구는 총 172건이었고, 저자는 총 143명이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18관련 연구자들은 광주·전라도/연구소(68명, 48%)와 서울·강원/연구소(33명, 30%)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대구·경북·경남·부산/연구소(20명, 15%)에 연구자들이 있으며, 특히 경남의 “한국논단”의 경우 5·18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발신하고 있는 단체로 5·18을 북한 개입설, 김대중 음모론 등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조명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5·18연구 또한 지역감정의 구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5·18연구자들의 “당사자주의”구도와 같은 맥락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5·18관련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학술지는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까? <표 4>는 학술지 소재지를 구분한 것이다.

<표 4> 학술지 소재지별 구분표

지역 학술지	광주/전라 도학술지	서울 학술지	경남/ 부산 학술지	충남/충 북학술 지	인천/강원/ 제주 학술지	지역미상 학술지
논문편수	88편	57편	16편	6편	4편	1편

2017년 9월 현재 한국연구재단(<http://www.nrf.re.kr/>)에 등록된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중 인문계열, 사회계열 학술지는 각각 554개와 807개로 도합 1361개의 학술지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학술논문 투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학술지들 중 5·18관련 학술논문들은 광주·전라도·서울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되고 있었고 (172편중 145편 83%), 5·18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경남의 한국논단(14편)이 지속적으로 비평을 하고 있을 뿐, 타 지역 학술지의 경우 5·18관련 게재실적은 대단히 미비한 상황이었다.

학술논문 저자의 소속지, 학술지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과 학술지가 광주와 서울에 편중분포 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5·18에 대한 평가 또한 동서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바로 5·18 정신이 “당사자주의”와 호남을 넘지 못하는 한계라고

보는 본 연구자의 근거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명시” 시도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승인된 “5·18 민주화 정신”의 전국화에는 교육 현장에서 제도화 되어 시행되어야 하나 아직도 5·18 민주화 정신은 호남교육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대학의 5·18관련 수업 개설 현황을 보면, 2007년 5월 현재 광주지역의 대학들의 경우, 전남대가 2005년 1학기부터 '5·18 항쟁과 민주·인권' 과목을 개설한 데 이어 다음 학기 조선대에서 '광주 항쟁과 민주사회' 과목을, 광주대에서 1학기부터 '5·18 민주화운동과 현대 한국' 과목을 교양강의로 개설하였고, 호남대는 2008년 1학기부터 '5월 항쟁과 한국 민주주의' 과목을 개설하였다. 그 외 타 지역 대학에서는 '민주·인권' 관련 과목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어서 5·18을 주제로 한 강의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5·18을 접하는 주요 창구가 되는 교과서에서도 이를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다.⁸⁾ 이에 전남대학교는 2008년 2월 관련 강의교재를 편찬하고 VOD(주문형 비디오)동영상 강좌 콘텐츠를 제작, 1학기부터 '5·18과 민주인권' 과목의 e-러닝 원격강좌를 시작하여, 전국 7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 가상캠퍼스를 통해 타 대학 학생들에게도 수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5·18 정신을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⁹⁾ 2012년 5월 현재 5·18 교육은 중·고등학교까지가 끝나고, 대학생이 돼서 특별히 정규과목을 신청해서 수강하지 않는 한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¹⁰⁾되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자와 학술지가 각각 동서로 나뉘어져 있음은 물론, 대학교육에서도 호남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5·18의 전국화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 사료된다.

8)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4>, 「광주 in」, 2007/5/8

9) http://www.kcfm.org/KMNews/kmNewsRead.php?c_no=4000541&cmr_year=2008&no=114854&relatedcode=연합뉴스, 2008/2/29.

10) <http://glocalds.co.kr/mult/show.asp?newsid=214528&ccid=10201030>, 「C BS 노컷뉴스」, 2012/5/16.

다음 <표 5>는 5·18기념재단이 연구지원을 한 연구지원 현황이다. 본 연구자는 기념재단이 연구자들에게 지원한 연구자들의 지역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¹¹⁾.

<표 5> 5·18기념재단 연구지원 현황(2005~2012)

광주/전라도	서울	경기도	충북	대전	부산	외국	미상
29건	26건	2건	1건	1건	4건	2건	20건

재단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까지 기념재단은 광주·전라도·서울·경기의 연구자들에게(57건, 66%) 지원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지역주의, 지역감정, 동서갈등 문제는 통일 한국을 이루는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문제이고, 그 해결 방법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인문학 연구자들의 민주와 인권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며 전국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한국 현대사에서 민중의 인권과 한국 민주화 실현의 중심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정신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통일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업은 전국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민교육을 담당하며 교류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연구자 또한 광주출신이라는 점에서 5·18 정신의 전국화라는 열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당사자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는 바이나,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빈도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기술한 글이라는 점에서

11) https://518.org/ease/gallery.es?mid=a10206010200&bid=0028&v_type=SK3&b_list=10&act=view&list_no=1&nPage=1&vlist_no_npage=0&keyField=&keyWord=&orderby=REG_DATE, “5·18기념재단 연구지원 현황(2005~2012).” 5·18기념재단.

결코 비약된 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같은 제언과 함께 결론을 내려한다.

한국사회에서 “동서갈등, 지역주의, 지역감정”의 유래에 대한 설은 학자에 따라 달랐지만 한국의 지역갈등이 “호남(피해자) vs 영남(가해자)”이라는 구도에 이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해방 이후 두 지역 간의 갈등구도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광주 민주항쟁이었고, 어찌 되었든 5·18 광주 민주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받았고, 2011년 5월에는 유네스코는 세계기록 유산으로 승인됨으로써 광주시민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5·18 정신의 재해석, 그리고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5·18 정신이 전국화 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 있게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시민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5·18 정신의 전국화 또한 활발한 연구와 교류,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전국적 분포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5·18관련 연구자들은 당사자인 광주·전라도/연구소(68명, 48%)와 서울·강원/연구소(33명, 30%)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대구·경북·경남·부산/연구소(20명, 15%)로 연구자 분포가 동서로 나누어져 있었다, 특히 경남의 “한국논단”의 경우 5·18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발신하고 있어 5·18은 학술적인 면에서도 동서로 나누어진 “당사자주의”적 입장의 연구로 귀결이 되고 있었다.

민중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화 실현을 위해 민중 스스로가 일어나

산화한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시민운동이다. 이 정신이 왜곡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통일됨으로써 통일한국을 이루는 정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들이 전국적으로 분산 분포 될 필요가 있다. 즉 전국의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5.18정신을 연구하고 시민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이 정신은 호남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지원을 할 수 있는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 보훈청 등의 정부기관들은 지금까지의 연구자 지원패턴(광주·전라도·서울지역 연구자들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검토하여 연구지원공모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연구지원 대상자들의 지역안배에 신중을 기해 관련 연구자들이 전국에 산포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양성된 연구자들을 통해 소규모 연구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의 시민교육이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됨으로써 5·18 정신이 호남을 넘어 전국화가 되는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홍화 외. 1976. “한국인의 지역적편견.”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pp.289-300.
- 권오성/한형서. 2008. “한국에서 정치적 갈등에 대한 시론적 대응방안”, 한·독 사회과학논총 18권 1호, 97.
- 김만흠. 1991.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 : 지역균열의 정치 과정에 대한 구조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김문조. 1993. “지역주의의 형성과정과 특성.” 임희섭·박길성 편. 『오늘의 한국사회』. 서울: 사회비평사. pp.151-168.
- 김성국. 1999.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적 불안정과 시민권력의 형성.” 김일철 외.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서울: 아르케. pp.299-343.
- 김영정. 1992. “한국 고도 경제 성장기의 경제적 지역격차: 1968-1985년.” 『한국의 지역 문제와 노동 계급』.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11-60.
- 김용학. 1990. “엘리트 층원에 있어서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pp.265-301.
- 김재철. 1996. “한국 정치에 있어서 지역감정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 김종철 외. 1991. 『지역 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pp.171-190.
- 김중호. 1993. “현대 한국에서의 지역감정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서울시 거주 지역 출신 주민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김주택. 1994. “영·호남 지역의 정치적 갈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 김진국. 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 방안.”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pp.221-253.
- 김해숙. 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pp.123-169.
- 나간재. 2009. “5월운동에서 국제연대의 발전과정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9권 2호.
- 남영신. 1991. 『지역패권주의의 한국』, 서울: 새남사.
- 노동일·박창진. 1997. “지역주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과학 9집, 4.
- 민정환. 1991. “사회심리적으로 본 지역감정.” 김종철·최장집, 지역감정 연구소 서울: 학민사
- 서기준. 2001. “한국의 정치적 지역갈등구조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19집, 17.
- 손호철. 1993. 『전환기의 한국정치』.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오수열 외. 2000. “동서지역갈등의 극복과 교류확대 방안”, 한국동북아논총, 17집, 106-109
- 오수열. 2004. “지역갈등극복을 위한 호남의 역할.” 236.
- 유재일. 2001.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한 지역통합의 과제.” 지역발전연구 8집 8호.
- 이소영, 정철희. 2003. “전통적 가치와 지역감정.” 한국사회학 37권 5호. 34-35.

- 이운갑. 2005. “특집: 5·18은 왜 아직도 호남에 갇혀 있는가?: 영남은 왜 5·18을 외면하는가?” 「기억과 전망」 10권, 67.
- 이이화. 1983. 『한국의 파벌』. 서울: 어문각.
- 이재의. 2005. “특집: 5·18은 왜 아직도 호남에 갇혀 있는가? : 1980년 광주: 10일 간의 민주공동체” 「기억과 전망」 10권, 35.
- 이진숙. 1959. “팔도인의 성격 특성에 대한 선입관념.” 『사상계』 12: 74-87.
- 임천용. 2007. “전두환이 아닌 김정일이다. 광주의 ‘민주투사’로 둔갑 시키지 말라”, 서울: 한국논단.
- 전병재. 1990.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pp.3-10.
- 정근식. 1997. “불균등 발전과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 담론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 현대사와 사회변동』.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285-315.
- 정근식. 2005. “특집: 5·18은 왜 아직도 호남에 갇혀 있는가?: 대한민국 5·18: ‘광주’의 전국화 명제를 다시 생각함.” 「기억과 전망」 10권, 87.
- 조경근. 1987. “정치사회화의 시각에서 본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의 실재와 악화 및 그 해소.” 한국정치학 편. 「재북미한국인 정치학회 제7회 합동학수대회 발표논문」, 107-126.
-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아 유권자』. 서울: 한울.
- 조기숙. 1997.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1집 2호.
- 조민. 1995.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민족통일원 보고서 95-24.
- 조순제. 2004. “동서갈등과 지역주의 극복방안.” 『대한정치학보』. 12집 1호. 20
- 조진태. 2005. “특집: 5·18은 왜 아직도 호남에 갇혀 있는가?:광주는 아프다.” 「기억과 전망」 10권.
- 최장집. 1991. “지역감정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기능.” 김종철 외. 『지역감정연구』. 학민사. 30-39.
- 최준영. 1998. “여론조사에 나타난 5·18 민주화운동과 지역감정.” 『지역사회연구』. 6권 1호.
- 최협. 1996. 『호남과 지역갈등: 원인분석과 대책』. 풀빛. 250-251.
- 홍기용. 2001. “지역주의와 지역 갈등 요인에 관한 고찰: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지역 개발 학회지』 13(2): 81-94.
- 홍동식. 1992. “연구주의와 지역감정.”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 한국논단. 2014. “광주사건은 김대중의 폭동이였다.”

-영문자료-

Yea, Sallie. 2002, “Regionalism and Political-Economic Differentiation in Korean Development.” pp.29-61 i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 UNESCO (ed.). Korean Politics. Seoul: Hollym.
- Choi Jang Jip. 1993. "Political Cleavages in South Korea."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 Chung En Sung. 1996. "Political Regionalism and Its Implications for Democratization in Korea", paper presented 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Seoul, Korea.

-인터넷 자료-

- https://518.org/ease/gallery.es?mid=a10206010200&bid=0028&v_type=S&b_list=10&act=view&list_no=1&nPage=1&vlist_no_npage=0&keyField=&keyWord=&orderby=REG_DATE,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 연구지원 현황(2005~2012)"
- <http://article.wn.com/view/WNAT1919bbd897a8cbcd5f732bd94e5c9fc4/> "검찰, 5·18희생자 '택배'로 비하한 일베회원 기소", (2013/10/13).
- <http://www.riss.kr/index.do>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http://www.nrf.re.kr/>, '재단등재학술지 목록'참고.
-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4> "광주 안에 갇힌 5·18 교육" 「광주 in」, 2007/5/8.
- <http://gj.local.cbs.co.kr/nocut/show.asp?newsCd=2145203&localCd=10201030> "5·18 교육, 대학이 나설 때다...5·18 32주년 기획보도③", 「CBS 노컷뉴스」, 2012/05/16.
- <http://www.wkforum.org/KM/news/kmNewsRead.php?sc=40000541&cm=&year=2008&no=114854&relatedcode=> "대학가 5·18 학문적 정립작업 활발" 광주=연합뉴스, 2008/2/29.
-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5>, "박근혜 정부 경찰 고위직 승진자 '영남 쏠림' 심해", 「시사인천」 2015/3/1.

투고일 : 2017년 7월 25일 · 심사일 : 2017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11일
--

* 정근하는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도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아시아문화교류 사업단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마침의 선택』(2009, 아름다운사람들) 외 번역본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사고정지(思考停止) 사회 분석: 일본의 사례로 본 한국사회의 사고정지 실태." "한일 청년층의 해외탈출 현상 비교연구" 외 다수가 있다.

〈Abstract〉

Plan Research to Overcome Regionality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Focusing on biased distribution of academic paper writers and journals

Jung, Geun-Ha
(Chosun University)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approved as a legal democratization movement by president Kim Young Sam in May 1993 and was approved as a global recording inheritance by UNESCO in May 2011 for the honor of Gwangju citizens to be restored. However, assessment on this until today after 35 years of occurrence is not nationally unified and the mind of Gwangju maybe only remembered as pride by Gwangju. There are several factors of this continuing situation but this researcher thinks the biggest factor is that professionals reanalyzing the truth ascertainment fitting spirit of the times who are in charge of citizen education are intensively distributed in Jeolla-do and Seoul. Moreover, the journal unlikely assessing 5·18 have enemies in the assailant area during activity that unity is not taking place with divided assessments and trapped in Honam. This study judges that the reason the meaning of 5·18 is trapped in Honam and not nationally unified is because of the limit of “adversary system.” Especially researchers who should analyze and explain this incident in a objective views are bias distributed (Gwangju>Jeolla-do) Seoul>Gyeongnam) in hometown areas that the possibility of 5·18 meaning not being unified was focused. Academic research studies, journal writers, and publication locations are divided in this study to reveal they are bias distributed and reveal that there is possibility that this biased distribution of researches are becoming obstacles in overcoming regionality.

Key words :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dversary system, researcher, biased distribution, nationalization of 5·18 spirit